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지역간 연계·협력의 확대 필요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전략 즉, “사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협력에 있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다양한 계획권역은 명칭, 목표, 수준은 서로 달라도 지역간 연계·협력을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대체로 볼 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등이다.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다양한 계획권역은 명칭, 목표, 수준은 서로 달라도 지역간 연계·협력을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역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다.

다채로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공모와 선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 나아가 동북아 국경지역 간 협력의

사업들을 지양하고 부처·기능별 연

계 확대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지역협력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부여, 한 형태

는 방법

가